

재계 총수 현장경영

최태원 회장, 제조혁신 박차

〈SK그룹〉

“울산 ‘AI 시티’ 만들어 갈 것”

울산포럼서 예술 결합 등 발전방향 제시
AI 산업 지속가능성 위해 수익모델 확보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성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을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예술이 결합된 ‘AI 시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제조 현장의 AI 전환(AI)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시민 생활 전반에 AI를 접목해 산업도시 울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지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 클로징 세션에서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제조AI ▲모두의 AI ▲아트(Art) 울산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미래 울산은 AI 시티의 모습이 돼야 한다”며 “제조AI에 기술과 제조 관련 솔루션 및 데이터를 더해 발전시키고, 모두의 AI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며 도시에 감성을 더해 예술이 있는 산업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AI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모두의 AI’도 울산 AI 시티 구상의 핵심이다. SK가 구상하는 시민용 AI 에이전트는 개인 맞춤형 공공·복지 혜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비롯해 행정·교통·의료·교육 등 생활밀착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용자의 요청을 직접 수행하는 실행형 AI로 구성된다. 산업 현장을 넘어 시민 일상까지 AI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울산 남구 SK이노베이션 울산CLX 현장경영(MBWA)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SK그룹

최 회장은 AI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익 모델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AI 경쟁의 핵심 과제로 속도·규모·안전에 더해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만큼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상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K는 울산의 제조 기반과 AI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특화 AI 생태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경상 SK텔레콤 AI CIC장은 포럼에서 울산 AI 인프라와 ‘모두의 AI’를 결합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회장은 AI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생각 근육’, ‘공감의 힘’, ‘적응 근육’, ‘피지컬 근육’을 제시하며 기술 활용을 넘어 사랑을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신동빈 회장, 산학협력 확대

〈롯데그룹〉

반도체 소재 등 경쟁력 강화

‘롯데 x KAIST R&D센터’ 준공식 참석
지속가능성 문제 연구 산학협력 거점
바이오·헬스케어 등 그룹 사업 연계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11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열린 ‘롯데 x KAIST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배종식 KAIST 총장과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했으며, KAIST는 연구 인프라 조성과 산학협력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롯데 x KAIST R&D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산학협력 거점이다. 롯데가 지원한 건축 기부금과 KAIST 자체 기금으로 조성됐다.

R&D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298㎡ 규모다. KAIST의 연구 역량과 롯데의 산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원천 연구부터 실험,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까지 수행한다.

센터에서는 ▲바이오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에너지·소재·공정 ▲첨단식품·헬스케어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시스템대사공학, 바이오연료·플라스틱,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분야를 연구한다. 연구 과정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와 KAIST는 반도체 소재, 지속가능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등 계열사별 전략 기술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은 롯데그룹의 관련 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R&D센터가 학교와 기업의 경계를 넘어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교수진과 학생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11일 대전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롯데 x KAIST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 회장은 연구 인프라 조성과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롯데지주

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롯데가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는 2012년 석·박사 위탁교육을 시작으로 기술이전과 인력 교류 등 KAIST와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2022년에는 ‘롯데케미칼-KAIST 탄소중립연구센터’를 설립해 공동 연구를 시작했으며, 탄소중립 분야 8개 과제를 수행해 특허 15건을 확보했다.

배종식 KAIST 총장은 “오랜 기간 KAIST의 인재 양성과 연구에 함께해 온 롯데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KAIST의 연구 역량과 롯데의 산업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연구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비정상 기차표 예매 차단 성과… 실제 암표거래 제재는 ‘제자리 걸음’

코레일, 매크로 차단 솔루션 주요
암표 단속에도 영업성 판단 등 문턱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 2월 차단 솔루션 도입 이후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기차표 예매를 차단한 건수가 급증했지만, 암표 거래를 단속해 수사의뢰를 맡겨도 실제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헛심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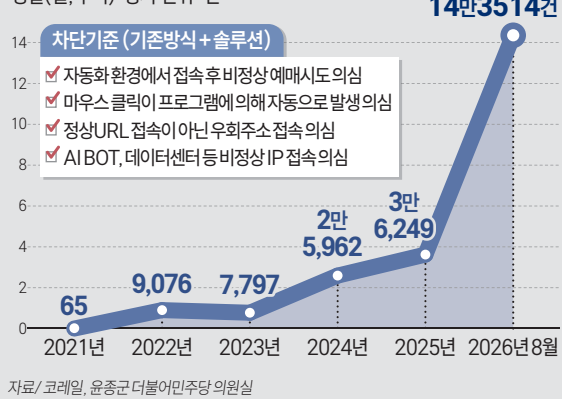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경기 안성시)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연도별·월별 매크로 프로그램 탐지 및 명절 및 평시 차단 건수’는 ▲2021년 65건 ▲2022년 9076건 ▲2023년 7797건 ▲2024년 2만5962건 ▲2025년 3만6249건 ▲2026년(8월까지) 14만35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코레일이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 접속 차단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배 정도 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탐지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레일은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이용해 1분에 150~500회의 비정상 접근이 있을 시 차단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자동화 환경에서 접속 후 비정상 예매 시도 ▲마우스 클릭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 ▲정상 URL을 통한 접속이 아닌 우회 주소 접속 ▲AI(인공지능) 봇, 데이터센

코레일 매크로 프로그램 탐지·차단 건수

명절(설, 추석)·평시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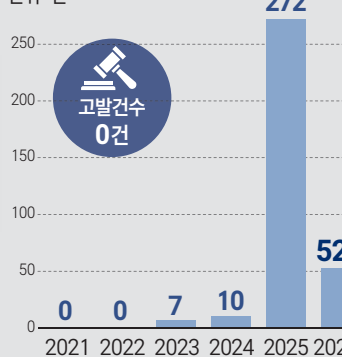
터 등 비정상 IP 접속이 의심될 경우 ‘매크로가 의심된다’는 창을 해당 행위자에게 띄우며 접속을 차단한다.

코레일은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웃돈을 얹어 승차권을 거래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3년간 코레일 회원 가입 제한 조치에 나서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실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한계가 있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레일이 윤종군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암표거래 의심 신고·제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코레일은 암표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기차표 관련 글 삭제 요청 ▲암표 제보방 운영(2023년

암표거래 수사의뢰 건수

단위: 건



9월~) ▲미스터리 쇼퍼(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1건 ▲2024년 109건 ▲2025년 83건 ▲2026년 26건의 신고를 받았고 ▲2023년 7건 ▲2024년 10건 ▲2025년 272건 ▲2026년 52건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나 경기도남부경찰청 등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경찰이 코레일에 수사의뢰를 받아 입건한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처벌이나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 승차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암표 거래를 하거나 암표 거래를 알선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법 시행령은 암

암표거래 처벌 수위



표 거래의 상습성, 영업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코레일 등이 암표 거래를 단속해 수사의뢰를 해도 사기에 준할 정도가 돼야 입건해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과거와 같이 철도역사 내에서 암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암표 거래가 유행하다 보니, 암표 거래 후 오픈채팅방을 폭파할 경우 자료가 남지 않아 추가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설명도 있었다.

형사처벌 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쉽사리

처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운전 중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기차표 암표 거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규정한 철도사업법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암표 거래 행위자의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공연법의 경우 프로야구 등 운동경기 암표거래나 공연 암표 거래 처벌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을 뒀다.

매년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회엔 암표 거래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지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종군 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귀성·귀경 기차표 확보를 위해 예매 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암표 확보 및 거래는 엄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암표거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내실화에 머리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